

# "무조건 안전" 국민 물먹인 당국

지자체 은폐에 환경부 감독 소홀



환경부의 전국 중소규모 정수장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수질검사 자체를 못 믿게 만들어 가뜩이나 흔들리던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우려를 낳고 있다. 울산의 수질측정치 조작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환경부 관계자는 "설마 같은 행정기관끼리,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검사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보고 했겠느냐"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검사결과 조작과 허위보고가 광범하게 벌어져 왔거나, 적어도 현재의 검사체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부의 대처도 문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에 비춰 수질기준 위반율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환경부는 이를 묵살했다. 울산시의 허위보고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환경부는 이미 전국적 수질검사 조작·허위보고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수장 운영실태 평가자료를 손에 쥐고 있었으면서도 울산시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중·소도시 주민들의 먹는 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제까지 여러차례 '수돗물 파동'을 겪으면서 급속히 개선된 대도시의 수돗물 공급체계와 달리 지방도시 정수장들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과 행정당국의 관료주의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하루 수돗물 생산량 5만 이하인 중·소규모 정수장은 483개로 전체 정수장 수의 86%를 차지한다. 무엇보다 이들은 인력부족에 허덕인다. 2002년 말 현재 전체 인력이 5명 이하인 정수장은 393곳에 이른다. 그나마 대부분의 인력은 기술직이나 연구직이 아닌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이다. 이렇다 보니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운영과 관리보다는 외곽경비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윤제용 서울대 응용화학부 교수는 "전문지식 부족은 작은 사고를 크게 덧낼 가능성과 웬만한 사고는 덮으려는 분위기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실시한 전국 중·소규모 정수장 일제점검에서도 정수장 근무인력 및 전문성 부족,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 인식 부족 등 문제를 짚고 근무여건 개선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 지난해에는 국회환경노동위에서 정수장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인력 채용을 의무화한 법안을 마련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구성하고 있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가 서울 등 대도시를 빼고는 유명무실한 것도



문제다. 장재연 아주대 교수(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시행자와 감시자 구실을 동시에 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 관련 행정의 폐쇄성과 관료주의가 시민참여와 감시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수돗물 공급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안전하니 믿으라는 당국의 태도가 일선 공무원들에게 문제를 은폐하려는 풍조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 대형건물 냉각탑 오염 심화 레지오넬라균 20곳서 검출... 전국 평균 웃돌아

지난해 경기도내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등에서 검출된 레지오넬라균 분포가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오넬라균은 세균성 폐렴 발생 원인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세균으로, 감염될 경우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6~10월 도내 병원과 관공서, 극장 등 대형건물 냉각탑과 분수대 등 371곳의 물을 채취해 레지오넬라균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4%인 20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국립보건원이 같은 해 6~7월 전국 대형 건물에 설치된 냉각탑의 물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검출률 3.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20곳 가운데 인체에 레지오넬라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커 살균소독을 해야 하는 기준(102CFU/100)을 초월한 곳은 16곳이었다.

이는 여름철에 도심의 대형 건물이 냉방을 시작하

고 분수대가 물을 뿜을 경우 이들 건물과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레지오넬라증에 걸릴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세계일보]

### "경관조망·일조권 사적권리 아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서울 여의도동 모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맞은편에 들어서서 3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시공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4월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권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받지는 않았다"며 "경관조망은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며 조망자의 사적권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침해가 없는 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특성상 건축을 계속 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조권,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었으나 본안 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

###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잇따라 폐기 설치예산낭비 등 졸속행정 비난

쓰레기 감량을 위해 각 기초단체에서 앞다퉈 설치했던 소각장 등 소규모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된지 수년만에 폐기돼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구직영 쓰레기 소각장 3곳 가운데 마지막까지 운영해오던 전포1동 전포소각장 및 집진시설을 지난해 말로 가동 중단한데 이어 지난 4월

구정조정위원회에 소각장 용도폐지 심의를 상정했다.

전포소각장은 2억2천만원을 들여 지난 95년 설치돼 하루 15t의 폐목재 등을 소각해왔으나 다이옥신 등 환경유해물질 유발로 인해 가동을 중단하고 명지소각장 등 대형 소각장으로 대체된다.

이에 앞서 구청은 90년대 중반 설치했던 양정소각장과 범천소각장도 아파트 부지 및 쓰레기 선별장으로 이미 용도폐지했다.

구청 관계자는 "소형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설치 당시만해도 권장시설이었으나 최근에는 환경문제 등으로 기피시설이 됐다"며 "설치예산을 낭비하는 꼴이지만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부산시, 종량제 쓰레기도 분리수거

부산시가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종량제 쓰레기의 가연성·불연성 분리수거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종량제 생활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없이 혼합수거해 처리, 매립장 부족 등 문제점이 많아 오는 6월까지 가연성 및 불연성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분리수거 방법은 단독주택의 경우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에선 중간수집 분리용기에 투입하면 된다. 특히 깨진 유리병 등은 연탄재 등과 함께 별도의 용기에 담아 건물입구에 두면 환경미화원이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 청소차량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쓰레기처리장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일보]

###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

서울기독교청년회는 지난 4월 13일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성인 남녀 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기오염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꼽았으며, 절반 가량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기오염을 꼽은 사람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질오염(19.8%), 유해화학물질(8.4%), 폐기물(5.8%), 토양오염(3.5%) 차례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7%는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목했다.

한편, 기독교청년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2004 수도권 푸른 하늘 만들기' 발대식을 열고, 서울·인천·수원·의정부·성남·군포·부천·시흥·안산·이천 등 10개 지역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 운동을 시작했다. [한겨레]

### 수도권 소각장서 다이옥신 다량 검출

수도권 소재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에서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7일 경인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인천지역 지정 및 감염성 폐기물 소각업체 21곳 34개 소각로를 대상으로 모두 42차례에 걸쳐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한 결과 매번 검사시마다 모든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특히 인천의 S소각장과 시흥의 H소각장은 각각 23.31ng/Nm<sup>3</sup>, 24.66n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으며 또 다른 소각장 2곳을 포함, 3곳에서 다이옥신이 1020ng가량 검출됐다.

또 나머지 소각장들도 10ng 이하 5차례, 5ng 이하



21차례였으며 1ng이하로 검출된 경우는 고작 11차례에 불과했다.

경인환경청은 그러나 이들 소각업체 가운데 시흥의 H소각장 1곳에 대해서만 기준치를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다며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신설 소각장의 배출허용기준치는 시간당 소각량이 4t이상일 경우 0.1ng, 소각량 2~4t 1ng, 소각량 0.5~2t 5ng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이들 구형 소각장에 대해서는 20ng이하 또는 20~40ng까지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소각장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치가 1~10ng으로 다소 강화되는 2006년까지는 이들 업체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계속 배출될 수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앙일보**

### 감염폐기물 소각시설 처리놓고 논란

환경부가 기존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을 3년 내에 폐쇄하기로 입법예고한 뒤 최근 이를 다시 조정하자 시민단체가 환경정책의 신뢰도를 낮추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은 지난 4월 6일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을 올해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3년 안에 폐쇄하기로 한 당초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노후화되어 가동할 수 없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은 환경정책에 불신을 지니도록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내용이 다소 바뀌었지만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기존 소각시설도 3년 내에 강화된 새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폐쇄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고 말했다. **중부일보**

### 주방용품서 납·카드뮴 검출

경기도내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방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Pb)과 카드뮴(Cd)이 검출됐다.

최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걱과 그릇 등 주방용품 160점(폴리에틸렌 재질 32점, 폴리프로필렌재질 65점, 폴리스틸렌 재질 10점, 멜라민수지 재질 35점, ABS수지 재질 18점)을 수거, 재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시험결과 8종의 주방용품에서 기준치 100mg/kg를 초과한 납 또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용품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절구 2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저통 1개, 폴리스틸렌 재질의 그릇 2개, 멜라민수지 재질의 주걱과 뒤집기 각 1개, ABS수지 재질의 계란절단기 1개 등이다.

절구 2개에서는 각각 납 140.8mg/kg과 카드뮴 123.1mg/kg이 검출됐으며 수저통에서는 납 283.4mg/kg가 나왔다.

또 그릇 2개에서는 최고 329.2mg/kg의 납이, 계란절단기에서는 무려 376.6mg/kg의 카드뮴이, 주걱에서는 357.1mg/kg의 납이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러나 이 부적합 용품들을 사용한 음식물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부적합 주방용품의 경우 황색 또는 적색의 색상을 내는 과정에서 납과 카드뮴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주방용품을 공산품이 아닌 식품위생 제도권내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